

뉴스레터#01

국 제 노 무 이 팀 장 0 1 0 - 4 4 3 3 - 3 4 3 0

21.04.13 공포 노동관계법령 변경내용정리

핵심

21.03.24 국회 본회의에서 아래 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7개 법률안 의결 21.04.13 공포등

-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 업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 코로나19 등 입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특례를 신설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개편등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시행: 22.1.1.)」 등

1 임금 채권 보장법 개정안

21.04.13공포 21.10.14시행 (시행 공포 후 6개월)

내용

목 록	현 재	개 정 안
용어 변경	체당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소액 대지급금 지급위해 법원의 확정판결필요	확정판결없어도 지방노동관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지급 절차 간소화
대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원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
부정수급 시 부과하는 추가 징수금	부정수급액의 1배	부정수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개정안



21.04.13공포 22.04.14시행 (시행 공포 후 1년)

내용

목 록	내 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 심의하기 위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 ※(DB)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 및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1천만원)을 마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등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

3 근로 기준법 직장내 괴롭힘 개정안



21.04.13공포 21.10.14시행 (시행 공포 후 6개월)

내용

목 록	내 용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의무를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4 산업 안전 보건법 개정안

21.04.13공포 21.10.14시행 (시행 공포 후 6개월)

내용

목 록	현 재	개 정 안
폭언등에 대한 건강 보호범위확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경비원처럼 현행 법상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마련		

5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22.01.01시행

내용

목 록	내 용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근로자와 유사하게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재다발 사업장 개별실적요율 개편	재해발생에 있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의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고, 사망사고 등 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폭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04.13공포 21.10.14시행 (시행 공포 후 6개월)

내용

목 록	내 용
사용자 교육 의무화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 신설 (21.04.13 시행)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 단축 (3→1개월)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앞으로는 사업장변경을 하였더라도 동일 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숙련성을 인정하여 재입국 특례를 허용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특례 요건 보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	동포 외국인력(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을 추가